

광주시, 행정혁신 결실 '대통령상 7관왕'

2025년 평가 역대 최다 수상...국무총리상 2건 등 총 68건
교육·돌봄·환경·긴급구조·디지털정부 등 전 분야 고른 성과
시민의 일상서 출발한 정책들 호평... 행정역량 전국적 인정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2025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 등 각종 평가에서 대통령상 7관왕에 오르는 등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대통령상 수상은 교육·돌봄·환경·경제·긴급구조·디지털정부 등 시정 전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둔 점이 특징이다. 대통령상 7건에 이어 국무총리상 2건, 장관급 이상 수상 21건 등 총 68건의 기관 표창을 수상, 시정 전반의 행정역량과 정책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데이터와 협업에 기반한 행정혁신을 지속 추진한 시정 운영이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결과다.

◇ 청년·교육 분야
광주시는 일경험드림 사업, 근로자 주거비 지원, 청년드림은행 등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생애주기적 청년정책을 추진했다. 이같은 청년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지역혁신중심 대학원체제(RISE) 계획 및 체계 구축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대규모 국비를 확보, 지역-대학-산업이 연계된 인재양성 체계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평가 우수 지역 선정, 글로벌대학 연차평가 A등급, 교육발전특구 1차년도 운영 성과 최고등급(A)을 획득하는 등 교육혁신 분야에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

◇ 복지·돌봄 분야
광주시 돌봄정책은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벤치마킹과 정책연구 대상으로 주목받았다. 대표 사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표준모델이 됐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정책대상 대상, 지역복지사업 평가 최우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우수 지자체 선정 등 돌봄·복지 분야에서 연이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인구정책 유공 국무총리 표창, 보육사업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은 생애주기별 촘촘한 돌봄 정책이 실질적인 평가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 안전·재난 분야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결과, 안전한국후련과 비상대비후련, 긴급구조 종합후련 우수기관 등 안전·재난후련 분야에서만 대통령 표창을 3개나 획득했다.

이밖에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국민안전교육 최우수기관, 전국 소방기술경연대



회, 소방정책 학술회의, 화재안전대책 평가 등 각종 안전·재난 분야 평가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기록하며 현상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

◇ 환경·기후 분야
광주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참여와 인식 전환을 중심으로 한 환경정책을 꾸준히 실시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25년 9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내 최초 정책 인증을 받았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세대 비율은 58%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에서도 선도적 성과를 냈다.

이와 함께 수도시설·하수도·폐기물처리 시설 운영 평가 최우수,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에서도 안정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행정 분야에서는 협업과 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을 지속 추진했다. AI 당지기,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산단노동자 조식 지원 등은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거나 벤치마킹 대상이 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등급, 정부합동평가 특·광역시 상위권, 시·도지사 공약 이행평가 최우수(SA) 등 주요 행정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로 돌아왔다.

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디지털정부 발전유공 대통령 표창, 지역통계 우수지자체 최우수 수상 등 데이터 기반 행정과 적극행정이 시정 전반에 정착됨을 입증했다.

광주시는 수상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협업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승원 기자



박균택 의원, 광역시 농촌 지원 확대를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9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은 '농촌'의 정의에 포함되는 광역시 농촌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농업식품기본법」 상의 '농촌' 개념은 대다수의 농업 정책 및 사업 대상을 결정하는 데에 기준이 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읍·면 지역 전체와 그 외의 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광역시 자치구의 동(洞) 지역 중 일부에도 적용되고 있었으나, 행정구역 전체가 농촌에 포함되는 읍·면 지역과는 달리 광역시 동 지역은 그 안에서도 농촌과 준농촌이라는 구분이 존재해 오랜 시간 동안 차등 지원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

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의 취지는 광역시 자치구에 소속되어 있으나 농지 규모,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농촌'의 형태에 가까운 동(洞) 지역은 더 많은 지역이 농촌으로서 지원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광주나 대전 등 일부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에 소속된 동 지역 중 토지 이용 및 주민들의 생활 실태는 농촌과 다를 바 없음에도 정부의 농촌 관련 정책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제한적으로만 지원을 받고 있어 광역시 농민과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박균택 의원은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광역시 농촌도 빠뜨리지 않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촌이 발전과 혁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김준행 기자

광주 동구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구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만 2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해 왔으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를 포함한 모든 출산가정과 입양가정에 출산축하금 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2026년부터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전면 확대

첫째아 포함 모든 출산·입양가정에 20만 원 지급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또는 입양신고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입양의 경우 만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가정에 한해 지원한다. 출산축하금은

출생신고 시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확대가 출산 및 입양가정에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동구는 ▲동구 육아카페 운영 ▲신생아 바구니형 카시트 대여 ▲돌상(백일상) 대여 ▲행복한 아빠교실 ▲동구 맘택시 등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추진한 결과, 광주 5개 자치구 중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오철수 기자

1면에서 이어짐

공공심아어린이병원은 서구·광산구 의료기관 대상 공개모집을 통해 1개소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 지원은 더 많은 산모에게 돌아가도록 지급 방식을 사후정산에서 선지급으로 변경하고 신청기간도 출생일 1개월에서 출생일 3개월 내로 조정했다.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 월급 278만327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인상한다.

광주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1대 1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취업상담, 경력설계, 직업훈련 등을 제공한다.

청년정책 원스톱 서비스인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은 기능 확대를 통해 청년활동가 등록 기능을 신설하고 회원 가입 때 본인 인증수단을 강화한다.

한시적 추진 후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월세지원은 지속 추진하며 지역 미취업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과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 지원

을 확대해 청년 안전망을 확보한다.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을 신규 시행하고, 청년문화예술페스티벌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대해 청년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전국번호판 도입으로 더 크고 선명해지며 전기차 충전시설은 신고제도 시행으로 설치·변경 시 신고 의무와 함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생겼다.

반려동물 영업 관련 동물등록·CCTV 설치 확대를 통해 동물생산업 영업장의 번

식 목적 월령 12개월 이상 개를 동물등록 의무대상에 추가했으며 고정형 CCTV 설치 의무 업종도 추가했다.

건축허가 때 소방 동의 대상은 규모가 작은 주차용 건축물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윤창모 정책기획관은 "새해부터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제도와 시책들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된다"며 "지원대상이나 시행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서구, '땡겨요'로 생활비 절감 시즌2 시동

2026년 공공배달앱 이용 시 최대 27.5% 할인 혜택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기강)가 공공배달앱과 온누리상품권을 연계한 '생활비 절감 시즌2'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누리는 상생 모델을 가동한다.

서구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대표이사 신현구), ㈜신한은행 땡겨요 사업단(대표 전성호)과 '서구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배달 소비 영역까지 골목경제 회복 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서구 관내 '땡겨요' 입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2500원 할인쿠폰 1억원어치를 발행한다. 쿠폰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선착순 500명에게 제공되며, 2만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온누리상품권 10% 선할인 ▲1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5%페이백 ▲서구가 발행하는 2500원 할인쿠폰 혜택을 더해 최대 27.5% 수준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상공인 체감 혜택도 커진다. 공공배달앱 '땡겨요'는 중개수수료 2%로 운영돼 민간 배달 플랫폼 대비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췄다. 여기에 온누리상품권 결제 확대와 할인 이벤트로 주문량이 늘면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절감과 매출 증가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석우 기자

